

민주 “檢권력 갖고 정치 보복, 독재자”…野연대 주장도

구속영장 청구에 비난…“배임 우격” “전두환 정권보다 더한 독재” 주장 결속 다짐 등도…“분연히 싸우겠다” 박지원 “반윤 세력 대동단결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이재명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권력 갖고 정치 보복하면 대통령이 아닌 독재자”라는 등 맹비난했다.
민주당 측 인사들도 반발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속 의지를 다졌다. 정의당 등과 공조를 통해 반윤 연대를 구축,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상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파렴치함 그 자체”라며 “수년 간 탈탈 털어 내

놓은 결과가 이런 것이냐니 부끄럽지 않냐”라고 밝혔다.
또 “범죄를 입증할 어떤 물증도 없다. 돈이 흘러간 흔적도 없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배임이라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보다 더한 전대미문의 검사독재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검찰 권력을 사유화한다 해도 김

건희 여사 추가조작은 지워지지 않으며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능도 감춰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인사들도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 주장을 이어갔다.
김홍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원하는 진술하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속, 이런 이성적 수사가 아니라 보복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방식을 통해 얻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조개기 영장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날(17일) 전당 차원에서 연 대규모 규탄대회 사진과 함께 “동지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다”며 “검사독재에 맞서 분연히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위원장은 “어제 국회 본청 앞 민주당 집회에 3000명이 모인 것은 민주당이 뭉쳤다는 증거”라며 “민주당이 뭉치



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기도에 승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공조가 필요하다”며 “차이가 있는 진보 정당이지만 보수 정당보다는 차이가 가깝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도 정의당은 물론 중소 정당과 보다 끈끈한 공조 협력 공유를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며 “반윤 세력의 대동단결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치, 민생경제, 외교, 국방안보,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쳐야 산다”며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원희룡 장관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최적 방안 찾겠다”

전남도, 국토부장관에게 경전선 순천 도심 우회 건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로 도심 구간 통과로 순천지역에서 반발과 논란을 낳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노선의 도심 우회 최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16일 순천 오천동 경전선 공사 예정 구간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순천 도심 통과 구간 우회 건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와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날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원희룡 장관

에게 순천시민의 염원인 경전선 순천 도심 통과구간 우회 노선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노관규 시장은 경전선 순천 도심 구간이 우회되도록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꾸준히 필요성을 전달하고 경전선 전철화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특히 김영록 지사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최대 현안인 ‘경전선 전철화사업 우회노선

반영·조기 완공’과 ‘전라선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했다.
전남도와 순천시의 이날 공동 건의에 대해 원 장관은 “순천 도심 우회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가급적 이른 시간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에서 보성~순천~진주~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을 잇는 경전선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국가철도 교통망이다. 경전선 노선 중 순천과 경남 삼랑진을 잇는 구간은 복선전철화사업이 올해 완성돼 하반기에는 ‘KTX-이음’이 운행된다.
해당 구간은 국토부 예비타당성소사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이 한목소리로 전철화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해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가운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전선 구간 중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은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토록 계획돼 순천 시민들로부터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고압 전차선 구조물로 경관이 훼손돼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민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안보리 위반, 도발 행위 중단”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명백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나아가 북한 도발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에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력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자충수가 될 뿐”이라며 “북한이 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굳건

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철통같은 방위 태세를 갖춰주길 바란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5시22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추경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은 고각 발사로 9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고도, 비행거리 등을 고려하면 화성-17형으로 추정되나, 지난 8일 열병식에 나타난 신형 고체추진 ICBM 소지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이번 행동은 미국 주도 유엔 안보리 소집, 한미 연합훈련 개시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평가된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 공조하면서 한반도의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17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안보리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 군사 활동 범주 외 추가적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고수위 행동을 예고했다.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서 “집략 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